



**측근 부패, 국가기관 선거 부정, 세월호 참사, 친제국주의 정책, 노동자·서민 공격 ...**

# 박근혜는 퇴진하라

박근혜와 그의 최측근 최순실의 부패 커넥션이 살살이 드러났다. <jtbc>, <한겨례> 등이 연일 새로운 폭로를 추가하고 있다.

최순실은 대통령의 일정을 하나하나 체크하고 연설문을 고쳤다. 최순실이 주도하는 비선 실세 모임이 박근혜에게 가는 보고 자료를 빼돌려 검토하고 이를 기획안으로 내면 그것이 토씨 하나 안 바뀌고 청와대의 정책과 사업으로 둔갑했다. 최순실에게 고위 관료 인사 청탁을 하고, 재벌들은 최순실이 주도한 수상한 사업에 수백억 원을 갖다 바쳤다.

이화여대는 최순실의 딸을 위해 학교 시스템이 붕괴될 정도의 특혜를 줬다. 입시를 위해 엄청난 경쟁을 치러야 하고, 학점을 따기 위해 밤새 공부를 하며 리포트를 써야 했던 평범한 학생들은 정유라의 입학 비리, 학점 특혜를 보며 참기 힘든 분노를 느껴야 했다.

누가 최순실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권력을 줬는가. 박근혜는 오늘(25일) 낮에 질의 응답도 없이 2분도 안 되는 녹화 사과 기자회견에서 그것이 바로 자신이라고 실토했다.

박근혜는 최순실의 국정 개입이 단

순히 연설문 수준이라고 했다. 그런 개입이 마치 의견 수렴 과정인 듯 말했다. 가당찮다. 박근혜는 청와대 앞 길바닥에서 며칠을 지새며 만나달라고 한 세월호 참사 가족들의 요청은 전혀 수렴하지 않았다. 살인 물대포로 백남기 농민을 죽여 놓고도 의견 청취나 사과는커녕 일언반구도 하지 않았다.

태생부터 박근혜 정부는 정통성이 없었다. 국가기관의 종체적 대선 개입으로 탄생한 것이 바로 박근혜 정부다. 대중의 환심을 사고자 내놓은 복지 공약은 지켜진 게 없다. 노인 기초연금 20만 원 공약은 취임도 전에 파기했다.

그래도 경제를 살리지 않을까 하는 실날 같은 기대 때문에 어찌어찌 위기

를 넘겼지만, 3년이 지난 지금 한국 경제는 심각한 위기 상태다. 그 대가는 고용 불안, 소득 감소, 집값 폭등, 복지 축소의 형태로 애틋은 수백만 사람들이 떠안았다.

박근혜는 수백 명이 목숨을 잃은 세월호 참사에도 책임이 있다. 박근혜가 추진한 규제 완화는 세월호 참사를 예비했고, 미국 제국주의에 협조하려고 서두른 제주해군기지 공사는 참사의 직접적 원인이 됐다. 박근혜는 어떻게든 진실을 은폐하려고 했을 뿐, 무고한 죽음에 아무 책임도 지지 않았다.

어디 이뿐인가. 박근혜 정부는 임기 4년 내내 노동자들과 천대받는 민중을 쉴 새 없이 못살게 굴고 공격했다. 진주

전태일 열사 정신 계승!

## 2016 전국노동자대회

11. 12. 14:00 시청광장



백남기-한상균과 함께 민중의 대반격을!

가자! 2016 민중총궐기

11월 12일 오후 4시 / 서울시청광장



의료원 폐쇄, 노조 파괴 공작, 공무원연금 개악, 노동시장 구조 개악, 무상보육 파탄, 공공요금 인상을 추진해 왔다. 일부 지방정부가 자체 예산으로 추진한 소박한 복지마저 방해하는 사악한 시장주의 세력이다.

박근혜의 친제국주의적이고 호전적인 대북 정책 또한 동북아시아에서 제국주의 갈등과 불안정 고조에 일조하고 한반도를 준비 경쟁으로 내몰고 있다. 박근혜는 내년 국방예산도 4퍼센트 넘게 증액해 40조 원을 넘겼다. 그 러면서 건강보험 정부 지원액을 깎았다.

또한 민주적 권리도 공격하려고 호시탐탐이었다. 통합진보당을 강제로 해산시키고 관련 인물들을 수년씩 감옥에 가뒀다.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에게는 5년을 선고했다.

마침내 선출되지 않은 비선 실세들이 평범한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농단을 부렸음이 폭로됐다. 앞에서 언급한 이미 누적된 퇴진 사유에 측근 부패가 추가됐다.

그래서 많은 청년·학생들이 들끓고 있다. 박근혜 퇴진, 하야 등의 단어가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 1, 2위에 오르고, 대학 인터넷 게시판에서 박근혜 퇴

진 시국선언을 하자는 의견들도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실제로 여러 대학에서 박근혜 퇴진 시국선언이 추진되고 있기도 하다.

이런 분노가 11월 12일 민중총궐기로 모여야 한다. 학생들만 아니라 민주노총도 “이제 모두 거리로 나서자”고 호소하고 있다. 청년·학생들의 시위와 노동계급의 고유한 힘을 발휘하는 파업 등이 결합된다면 박근혜 퇴진이 현실적 요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박근혜는 퇴진하라.

10월 25일  
노동자연대 학생그룹